

■ 부적격업체 감독 강화

정보망을 통해 불법 일괄하도급,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에 대해 수시로 조사하고 정보망의 자료와 시공능력평가기 제출한 실적정보를 연계해 전문건설업자간 단단계 재하도급도 조사·처분한다.

공사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일

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기준도 상향조정(재하도급금지 위반시 영업정지 4월 → 6월)한다.

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정보의 인터넷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PQ신인도에 재해율 반영제도 폐지해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청와대, 감사원 등에 건의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건설공사 재해율제도를 폐지해 주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인도에 재해율을 반영하는 제도가 재해를 줄인다는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산재은폐와 재해근로자 보상처리 등으로 업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업체의 부작용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노동부, 청와대, 감사원 등에 건의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건설산업의 산재발생률이 높아 사업주의 산재예방노력을 촉진시키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PQ신인도에 업체별 재해율을 반영시켜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재해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재해율이 공사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 짓는 주요 잣대로 작용함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PQ점수관리를 위해 이를 은폐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또 산재은폐로 하수급인은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보상처리비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별도로 지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사전적 안전예방활동보다는 사후적 PQ점수관리에만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PQ재해율을 포함시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는 재해율 왜곡현상과 산재은폐 관행 만연, 재해근로자 치료 및 보상비용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비용부담 등 심각한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재해율은 낮추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PQ신인도에 재해율을 반영하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노력의 하나로 안전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산재를 은폐할 때 강력히 가중처벌하며 산재은폐를 신고하는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전적인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